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 2010년 보건복지정책의 변화와 전망

2010년에 들어서면서 글로벌 경제위기가 극복되고 있는 가운데 서민생활 안정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정책의 우선순위로 대두되고 있다. 금융시장의 안정에 이어 경제성장률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위기 대응을 위한 한시적 대책들도 정리되고 있다.

이번 경제위기에서는 1998년의 위기와는 다르게 구조조정 및 대량해고가 없었던 점과 함께 당초의 우려와는 달리 기존의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였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4대 사회보험제도가 본연의 역할을 비교적 무난하게 수행하였고, 희망근로사업과 긴급지원제도 등 한시적 대책도 실기함이 없이 제때 기능을 발휘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도 복지 선진국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작동됨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아직은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데다 아랫목부터 회복되어 가는 과정에서 경제회복의 온기가 뒷목까지 전달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출구정책의 선택은 신중함이 요구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는 절대적 빈곤 문제

에서 상대적 빈곤 문제로 무게 중심이 이동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방향의 선회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빈곤을 자체보다는 자산과 소득의 분배구조가 쟁점이 된다.

중간층이 줄어들고 빈곤층이 증가해서는 국가가 안정적일 수 없다. 따라서 중간층을 늘리고 빈곤층을 줄이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그런데 1998년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 계층구조의 불안정성은 산업 및 노동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대기업과 수출기업이 이전만큼의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고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진행되면서 일자리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에서의 생산 분배과정에서 안정적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한계가 있다면 경제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회시스템으로 보완하는 것도 대안이다. 즉, 의료, 교육, 주거 등 생활에 필수적인 비용항목에 대해서 사회안전망을 공고하게 만들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아지더라도 국민불안은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보다 실업율이 두 배 이상 높은 데도 불구하고 서구사회가 안

정적인 것은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하는 든든한 사회보장제도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저고용시대 대안의 하나로서 사회안전망의 재구조화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국정 아젠다이다. 2009년에는 2008년보다 더 낮은 출산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적으로 대대적인 캠페인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높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자녀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기 위한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고령화율은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10년에 들어서 주목되는 것은 베이비붐 세대의 대이동이다. 베이비붐 세대를 크게 잡으면 1955년생부터 1974년생 연령계층까지 포함되는데, 전인구의 30%를 넘는 규모도 그렇지만 이들 세대가 2010년부터 본격 은퇴를 시작하기 때문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이동이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가격의 변동을 일으키고 더 나아가 산업기능인력을 감소시킬 수 있고 노령인구의 부양 부담 증가에 따른 재정적·경제적 부담이 벌써부터 우려를 낳고 있어 베이비붐 세대의 실체에 대한 조사부터 차분한 대응이 요구된다.

2010년 들어서 그동안 학수고대하던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이 개통하게 된 것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측면에서 신기원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을 포함한 사회복지 관리운영 상의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결함은 물론 맞춤형 복지 등 복지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효율성뿐만 아니라 급여의 형평성 제고도 함께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시스템이 안정성을 확보하기까지는 시간

이 걸리겠지만 앞으로 정보의 통합차원을 넘어서 수집된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정책으로 환류시키는 기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2009년말 국회에서는 4대 사회보험의 통합징수 관련법도 통과되었다. 2011년 통합징수 시행을 목표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사회보험 서비스가 높아지는 계기도 되어야 할 것이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장애인을 위한 기초연금제가 2010년에는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별적인 수당제도와 보편적인 연금제도는 그 전제부터가 다르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급여수준과 수급자수는 만족할 정도는 안 되지만 길게 보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장애인 요양제도의 정립을 위한 준비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두 개의 핵심적인 장애인 관련 제도가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다.

보건의료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보건의료는 단순히 국민건강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예산들도 일부 반영되었지만 보건의료 인력의 적정 수급, 보건의료 서비스의 선진화 등 보건의료 부문에서 해결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 이제는 단순한 흑백논리에 기초한 대립보다는 과학적인 근거위에서 미래지향적 합의구조를 만들어야 할 때이다.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제도는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지고 조금씩 선진화되어가고 있다. 아직은 선진국의 복지수준은 아니지만 경제발전 수준을 따라잡기 위하여 숨 가쁘게 나아가고 있다. 한국의 보건복지제도가 가야할 길은 아직 남아 있지만 무겁지만은 않은 것은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일거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부터 한 걸음씩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한 때이다. **문경복**